



회원사 동정

회원사 동정

한 ● 국 ● 수 ● 력 ● 원 ● 자 ● 력 ● (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최종부지 선별작업 5월말 착수

한 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최양우)은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4개 후보부지 중에서 2개 최종부지를 선별하는 작업을 오는 5월 말부터 본격 착수한다.

한수원은 또 이를 위해 조사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을 19일 공고했다.

이번 조사용역은 경북 울진군, 경북 영덕군, 전남 영광군, 전북 고창군 등 4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후보지를 대상으로 최종부지 2곳을 선별하기 위해 지질 및 주변환경 등에 대한 입지타당성을 조사하게 된다.

한수원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후보부지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입찰참여신청서를 내달 3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후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실시,

5월중에 입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약 35억원(추정가격) 규모로서 착수 후 11개월간 수행된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4개 후보지 가운데 2개 후보지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조사에서는 토지·기초, 향만·해안, 수자원계획, 도시계획, 조경, 지질·지반, 대기관리, 수질관리, 방사선관리 등 지질 및 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번 용역입찰에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대우엔지니어링, 한국전력기술 등 5개 업체가 응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 ● 자 ● 력 ● 의 ● 학 ● 원

새로운 위암 관련 유전자 세계 첫 발견

정 상적인 위 조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Bcl-w'란 새로운 유전자가 위암세포에서 발현, 항암제·면역제제 등 세포사멸 물질에 저항해 암세포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견됐다.

이로써 위암의 진단·예후·예측·치료를 위한 새로운 표적인자가 제시돼 위암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아울러 한국인의 주요 암사망 원인 중 하나인 위암 진단 및 치료 기술이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의학원(원장 심운상) 실험병리학연구실 임흥덕 박사팀은 원자력의학원 병리과 이승숙 박사팀과 공동으로 과학기술부 방사선 관련 암기초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 이처럼 위암과 'Bcl-w'의 상관관계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임흥덕 박사팀은 "국내 위암환자 50명의 암 조직과 위암 세포주를 이용, 정상 위 조직에서는 전혀 발현하지 않는 'Bcl-w'란 유전자가 'SAPK/JNK'라는 효소의 활성화를 억제해 위암 세포를 보호하며, 특히 'Bcl-w'의 발현 정도가 위암환자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조기에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암연구 전문가들로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이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 'Cancer Research'에 지난달 게재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APK/JNK= 'Stress-Activated Protein Kinase/c-Jun N-terminal Kinase'의 약자로 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며 이것이 활성화할 경우 세포를 죽일 수 있다. SAPK 또는 JNK라 불린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5월 10일 개원

국내 최초의 Full 디지털 종합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원장 성상철)이 7년여의 오랜 준비를 끝내고 마침내 5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정상진료를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준공식을 가진데 이어 의료장비 Set-up, 의료진 등 필요인력 배치 및 건물 내의 부 마감공사 등 하드웨어 완성은 물론 수차에 걸친 의료장비 가동 및 모의환자를 통한 진료시스템 리허설을 실시하였고,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실제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5월 10일 정상진료 시작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검증 절차를 거쳤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노인병센터, 심장센터, 뇌신경센터, 폐센터, 관절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6개 센터와 총 23개 진료과 등을 두고 있으며 교수 120여 명, 임상강사(전문의, Fellow) 80여명, 전공의 240여명, 간호사 530여명 등 총 1,30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으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본원 의술을 그대로 이어감은 물론 노인 및 성인질환에 대한 국가 중앙의료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완벽한 디지털 의료 시스템 구축, 질병별 전문센터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 진료 및 응급센터 역할 등을 꼽을 수 있다.

원자력 및 RI 동정

정부 새 방침에 지자체 반발

정부가 양성자 가속기와 방사성폐기물 매립장 부지 선정을 연계해 결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국가 과제인 방사성폐기물 매립장 부지 선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합의해 매립장 유치를 신청하는 지역에 대해선 양성자 가속기 후보지 선정 때 특별 가산점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큰 이권이 걸려 있는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주는 대가로 그동안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로 부지를 선정 못한 채 표류해 온 방사성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성자 가속기 유치를 위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여온 전북. 대구. 전남. 강원 등 4개 광역단체는 정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익산시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이며 만반의 준비를 해와 1.2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속기 유치를 자신하고 있는데 이제 와 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북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치활동을 펴온 대구시는 “성격이 다른 두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기초과학을 모르는 무식한 처사”라며 “당초 선정 원칙, 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입지를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강원도 역시 “정부의 새로운 방침은 국가정책의 신뢰성 훼손과 함께 절차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영광군의 지형적 조건, 주변 환경 등이 뛰어나 다른 경쟁지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결정이 연기돼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선 시민, 환경단체들의 반대. 찬성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경북 울진. 영덕과